

시의회, '오월' 예산 삭감하고 지역구 예산은 증액

5·18 대중교통·민주교육 등 삭감 축제·의원활동비 등은 90억 증액 오월단체·시민사회 "시대에 역행" 의회 "계수 조정 과정에서 재논의"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광주시 주요 사업 예산을 400억원 넘게 삭감하고 자신들의 지역구 축제 예산 등은 증액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오월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최근 광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7조6069억원 중 407억 500만원을 감액했다. 이 중에는 광주시와 시의회가 올해 4월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를 제정해 추진한 '5·18 당일 대중교통 무료 사업'도 포함됐다. 또 △민주보훈과가 제출한 민주시민교육비 4000만원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의 전시·운영비 6000만원 △국내외 교류 협력비 1500만원 등도 줄줄이 삭감됐다.

특히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5·18 대중교통 무료 사업'은 전액 삭감돼 시민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은 내년도 예산안에 시내버스 무료 이용금 2억6800만원·도시철도 무료 이용금 5100만원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대중교통 지원 예산이 중복돼 해당 사업 추진 시 '시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담당 상임위원 행정자치위는 "시에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으로 연간 1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도시철도 또한 적자를 보존하는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시는 현재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다. 여러 제반 사항에 따라 추가 지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필요 시 교통국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에 따라 편성한 금액인 만큼 해당 예산이 보전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례 19조 3항에는 '5·18 정신계승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내버스·도시철도 무임승차

등 지방 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한강의노벨문학상 수상과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광주와 민주화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도시철도를 이용한 시민은 하루 6만명에 달한다"며 "'5·18'은 인권·민주화의 도시 광주의 상징과도 같다. 시와 의회가 합심해 기본조례를 제정한 만큼 오월정신을 선양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말했다.

5·18예산 삭감을 두고 오월·시민사회 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범태 5·18민주묘지관리소장은 "5·18 당일엔 민주묘지는 (사람이 몰려) 공식적으로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게 공지를 한다. 특히 외지인은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는데, 증차를 하지 못할 망정 여건을 축소했다는 점은 의아스럽다"며 "올해는 정국상황 상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의 두려움과 역사의

아픔은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만큼 더욱 많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시와 의회에서 5·18통합조례를 만든다고 해 정말 기뻐했다. 대중교통 지원도 좋은 사업이라는 평이 많다. 그런데 내년 5·18 45주년을 앞두고 갑작스레 규모가 축소되는 건 맞지 않다"며 "오월정신은 너나할 것 없이 서로 돕는 민주·평화 정신이다. 교통비 지원 또한 그 결을 충분히 같이 한다. 외지인들이 광주에 왔을 때 '이날은 뭔가 특별하구나', '광주는 역시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꼭 사업이 재추진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시의회는 이번 본예산안에 지역구 축제, 자치구 도시공원 관리, 시의원 출장비 등 의원들과 밀접한 지역구나 조례 관련 예산은 신규 증액·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자치구 도시공원 관리예산 10억원 △장기 요양법인생활시설 지원 1억1500만원 △양동시장 통맥축제 2억원 △무등시장 야시장축제 1억원 △국외출장수행

여비 4200만원 등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구지역위 관계자는 "최근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와 집행부 간 양금이 있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여파가 시민들의 생활과 연결된 내년 예산으로까지 미치면 안 된다"며 "여기에 양동시장 축제 비용 추가 등으로 내부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 표심 얻기 예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우려가 잇따르자 '예결위 계수 조정에서 재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시의회 예결위 의원은 이날 "5·18 대중교통 무료 사업을 살리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며 "다만 민주인권평화국 자체 예산으로 같이 교통국 예산으로 같이 등 여러 논의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대답은 아직 하기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예결위를 거친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전남도의회, 내년 도·교육청 본예산 심사 마무리

도 2.4% ↑ ·교육청 0.7% ↓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남도의회 예산심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전남도가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는 12조5436억 원으로 전년보다 2974억 원(2.4%) 증가했고, 도교육청은 4조8850억 원으로 320억 원(0.7%) 감소했다.

예결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미래 인재 육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지난 2일부터 심사에 나서 도 일반회계 36건 183억 원은 삭감, 90건 183억 원은 각각 증액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원안 의결했다. 교육 예산의 경우 세출10건, 99억6000만 원은 삭감하고, 28건 99억6000만 원은 증액했으며,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남도 주요 삭감 사업은 해외수목 특

별전시 3억 원, 무안공항활성화 추진 3억 원 등이고, 순천대글로벌대학 지원 40억 원, 목포대글로벌대학 지원 50억 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 전남형 기본소득 30억 원 등은 증액했다.

또 도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42억 원, 스마트교육활성화 46억 원은 삭감하는 대신 스마트기기보관함 27억 원, 온종일 케어센터구축 13억 원, 학생국제교류지원사업 11억 원 등은 증액했다.

나광국 예결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전남의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에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가 의결한 예산안은 12일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를 거쳐 전체 의원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지역먹거리 정책 '우수 지자체' 선정

농식품부장관 특별상

광주시가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식품유통공사(aT)가 전국 15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농식품부장관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역먹거리지수 평가'는 지역먹거리 계획과 관련된 지자체의 실천 노력과 확산 정도를 평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도농 복합형 평가와 69개 자치구를 대상 도시형 시범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광주시는 농식품부장관 특별상을 수상, 지난해 한국농식품유통공사 사장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광산구는 한국농식품유통공사장 장려상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과도·농협력형 먹거리 소비기반 확대,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 지표에서 시민에

게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광주시는 2013년 남구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가 직영으로 학교 및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북구·광산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동구·광산구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 유·초·중·고·특수학교 총 581개교에 친환경 우수 식재료 1403톤(77억원)을 공급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푸드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 '광주 공공먹거리 육성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광주시는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 지역 공공급식 수요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택송 농업동물과장은 "먹거리지수 평가 2년 연속 수상은 지역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 거둔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 지역먹거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자원봉사자대회

강기정 광주시장, 김재규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11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자원봉사자대회에서 추록의 온기나눔 대자보 도시광주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전남도, 재생에너지 펀드 활성화 나선다

토론회서 연구 용역결과 발표 유형에 '커뮤니티 펀드' 1순위 내년 상반기까지 규모 등 협의

전남도가 재생에너지 펀드 활성화에 나선다.

전남도는 11일 목포 폰타나호텔에서 재생에너지 펀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 재생에너지 펀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자원이 햇빛, 바람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최대한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통해 미래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인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 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22개 시군, 주민, 재생에너지·금융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펀드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남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년 연속 우수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하반기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펀드형 주민참여는 펀드운용사가 주민 투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발전사업에 투자 후 펀드수익을 투자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전남도는 '전남 재생에너지 펀드 조성' 연구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펀드 유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적용을 받는 커뮤니티 펀드가 1순위로 검토됐다. 커뮤니티 펀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의 관리·감독을 받아 투자안정성이 높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투자자 모집 및 수익금 배분이 공정하고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역 제한도 가능해 발전소 인근 주민, 송전선로 경과지,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모델 설계가 가능하다.

펀드자금의 투자 방식은 발전회사가 발행한 선순위 채권에 투자해 고정금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확보하고 언제든지 투자금 환수가 가능한 방식이 시범

사업으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남도는 풍력 16GW를 비롯해 전기사업허가를 완료했다. 개발행위허가 이후 계통연계가 가능한 40MW 규모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은 70여 개, 18GW 규모다.

총 사업비는 130조 원 규모로 이 중 3%만 전남 재생에너지 펀드를 조성해도 3조 9000억 원의 주민 출자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군과 협력해 전남 재생에너지 펀드 시범사업 대상을 발굴하고 해당 시군, 발전사업자와 펀드조성 규모 및 수익률, 투자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제정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전 시군으로 조기 확대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밝혔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다중밀집시설인 요양병원에서의 전기차 폭발에 따른 대형

화재 발생이라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천과 같은 상황을 재현해 이뤄졌다. 재난대응 체계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지현 기자